

가계부채와 부채원인

요 약

- 2009년 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734조 원이고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855조 원에 달하고 있다.
- 가계부채는 2005년 이후 연평균 약 1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가처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가계부채의 분포를 살펴보면 고소득계층이 전체 부채의 약 6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적으로 볼 때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계부채의 급증 원인으로는 저금리, 주택가격 상승기대 등의 수요측면과 금융회사의 대출경쟁 등 공급측면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위기설들이 제기되고 사라졌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사라지는 통상적인 위기설과는 달리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한 위기설은 2002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우려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가계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이고, 둘째는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우려이다.

지금까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접근 내지 이와 관련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주로 총량 개념에 입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계 채무상환능력 평가지표를 산출하는 데에는 경제 전체, 또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거시자료를 이용한 가계 채무상환능력 평가지표로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capital gearing ratio),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debt to

income ratio)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표들을 활용한 총량개념의 가계 채무상환능력 평가는 소득, 연령 등 가구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총량개념에 입각하여 가계부채를 평가할 경우 어떤 유형의 가구가 건전하고 어떤 유형의 가구가 위험에 직면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분포에 따라서는 현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상환능력이 양호한(소득이 높거나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계부채는 경제 전체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부채가 자산이나 소득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에 관한 미시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거시지표 분석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차입을 할 수 없었던 가구가 소비자금융제도의 발달로 필요한 대출을 얻게 되었을 때 가계는 소비를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게 되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계부채의 경제발전에 대한 순기능이 부각될 수 있겠지만, 가계부채가 기존 부채보유 가구의 채무액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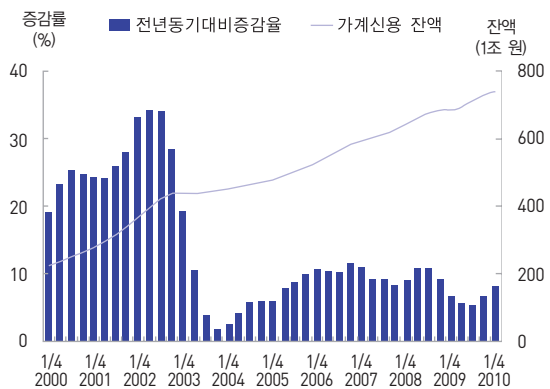
이 글에서 우리는 한국 가계부채의 추이를 살펴보고 국제비교를 해 본 다음, 가구분포와 소득 및 연령별 분포를 관찰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부채의 추이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크기는 가계신용자료와 자금순환표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가계신용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이 제공한 판매신용의 합(가계대출+판매신용)으로 정의된다. 자금순환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부문의 부채를 가계부채의 크기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림 V-15]에서 가계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2000-2009년 기간 중 가계신용은 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2000-2002년 중 20-30%에 달하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2003-2004년에는 대폭 둔화되기도 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도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09년 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734조 원(가계대출 692조 원, 판매신용 42조 원)이고,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855조 원에 달하는

[그림 V-15] 가계신용 잔액과 증가율: 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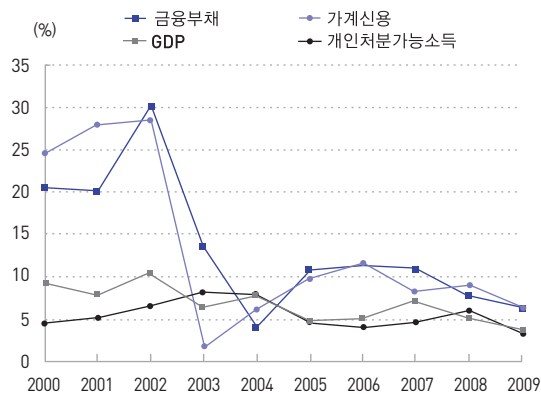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1) 자금순환표 상 개인부문에는 순수가계 이외에 소규모 개인 기업 및 민간 비영리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가계신용에 비해 개인부문 금융부채가 더 큰데 이는 주로 포괄범위가 상이한데 기인한다.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부채 증가세는 [그림 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신용카드사태 이후 2003~2004년 기간을 제외하고 개인가처분소득이나 GDP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된 2004년 이후에도 개인가처분소득과 GDP는 4~6%대의 증가율을 보인 데 비해 가계신용과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상대적으로 높은 8~11%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V-16] 가계부채와 소득 증가율: 2000~2009



주: 1) 전년대비 증가율임.

2) 금융부채는 1993년 SNA 자료 기준이고, 2002년 이전은 1968년 SNA 자료 증가율을 이용함.

3) GDP와 개인처분가능소득은 2005년 지수기준년 계열을 이용함.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그 결과 <표 V-1>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2009년 말 현재 그 비율은 143%로 2000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하였다. 이는 신용카드 위기가 발생하였던 2002~2003년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비슷한 추세로 상승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담보가능성을 나타내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0%대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표 V-1> 가계의 금융부채 비율¹⁾: 2000~2009

	금융자산 대비	개인가처분소득 ²⁾ 대비	GDP ²⁾ 대비
2000	37.9	80.6	48.7
2001	40.9	91.9	54.1
2002	46.6	121.7	69.0
2003	45.1	117.8	67.9
2004	44.0	113.7	65.7
2005	43.0	120.4	69.6
2006	44.1	128.8	73.8
2007	43.4	136.4	76.3
2008	47.6	138.8	78.2
2009	43.9	143.0	80.4

주: 1) 상거래신용, 기타 금융자산 부채 등 비이자부 자산 부채는 제외됨. 2002년 이전은 1968년 SNA 자료 기준이고, 2002년 이후는 1993년 SNA 자료 기준임.

2) 2005년 지수기준년 계열을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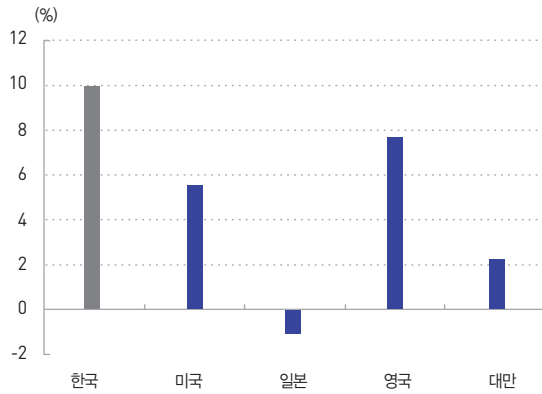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가계부채의 국제비교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림 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2006~2008년)의 연평균 금융부채 증가율은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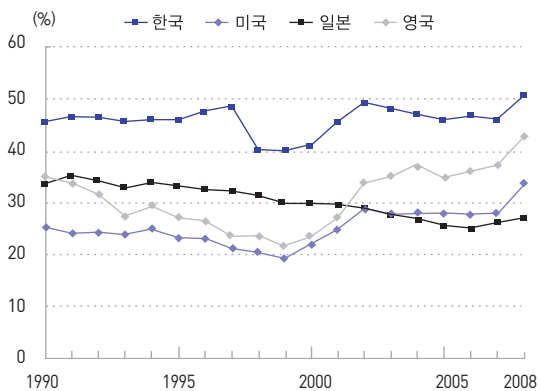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그림 V-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국가들에 비하여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동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그것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실물자산 보유비중이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17]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금융부채 평균 증가율: 2006-2008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그림 V-18]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개인부문 금융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1990-2008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가계부채의 분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량지표를 토대로 한 평가는 가계부채의 분포와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2006년 「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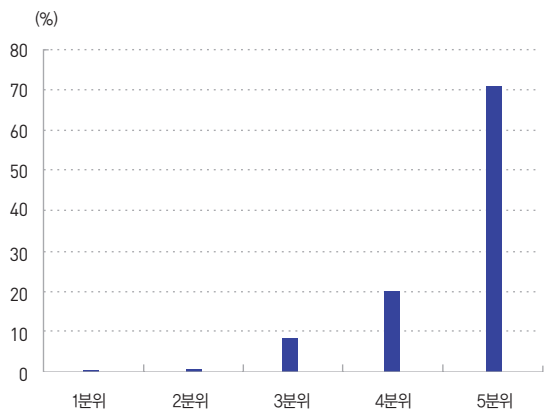
자산조사」 자료²⁾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분포 현황을 부채의 크기, 소득의 크기, 자산의 크기 및 연령집단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부채규모별 분포

먼저 가구 분포를 보면 상당수의 가구가 부채가 없으며 부채가 있는 가구들은 소액 부채가구와 고액 부채가구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분포의 형태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고액 부채가구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를 가계부채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하위 60%가 가계부채 총액의 9%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상위 40%가 가계부채 총액의 91%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V-19]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최상위 20%(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총액의 71%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 부채가구의 쏠림현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V-19] 부채분위별 부채보유 비율¹⁾: 2006



주: 1) 개별 가구의 부채를 합하여 가계부문 전체 및 소득계층별 부채액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부채분위별 보유 비율을 산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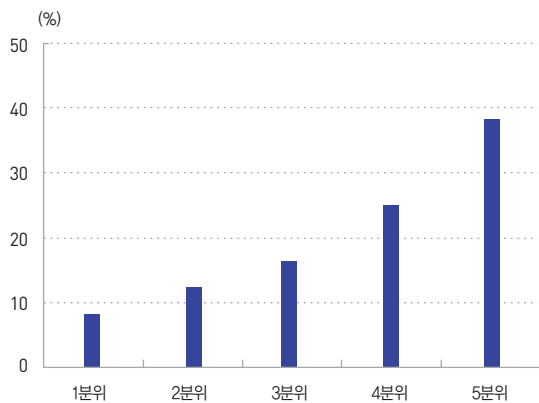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

2)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가구의 자산보유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5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소득은 2005년 1년간의 소득이고, 자산은 2006년 5월 현재 기준이다.

소득수준별 분포

가계부채의 분포를 소득수준에 따라 나누어 보면 고소득계층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고소득계층이란 소득의 크기가 가장 높은 4분위 및 5분위 40% 계층으로 정의된다. [그림 V-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득 계층이 전체 가계부채 중 63%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저소득(1분위) 계층의 경우 8% 정도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0] 소득분위별 부채보유 비율: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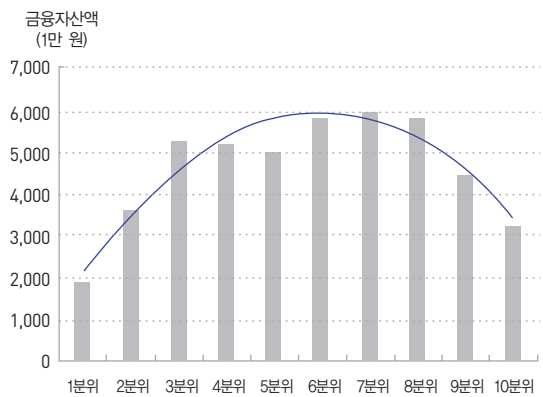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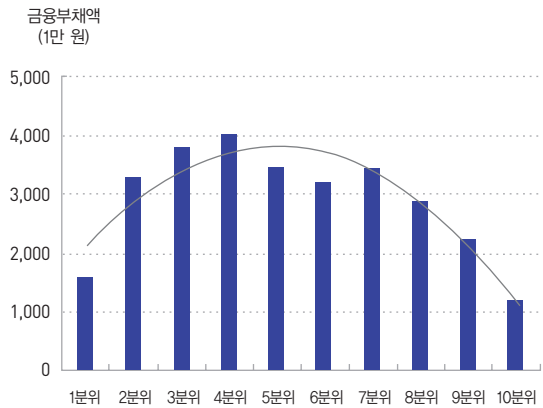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

연령별 분포

연령계층별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와 자산 축적은 역U자형의 인생주기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부채와 금융자산³⁾의 축적 패턴을 비교하여 보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축적의 최고점 시기가 상이한데, 다음 [그림 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자산 축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40-43세)에 부채가 최고점에 다다른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령대별 소득수준과 관계가 있

[그림 V-21] 연령집단¹⁾별 가계 부채 및 자산 보유액: 2006



주: 1) 각 분위별 중위연령은 1분위 28세, 2분위 35세, 3분위 40세, 4분위 43세, 5분위 46세, 6분위 49세, 7분위 54세, 8분위 59세, 9분위 65세, 10분위 74세임.

출처: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6.

는데, 연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에서 부채도 가장 높다. 그 이후 부채는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은 은퇴 직전 내지 은퇴 시점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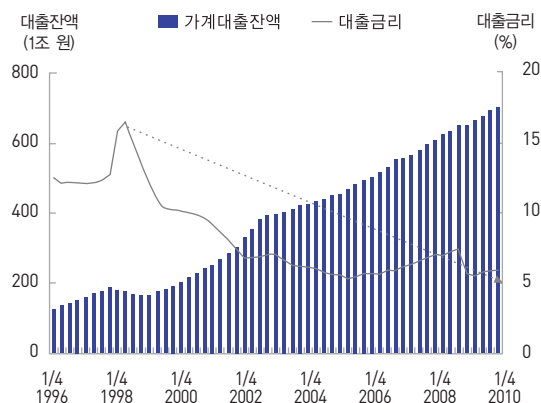
3) 금융자산은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 주식, 채권 및 갯돈 불입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며, 총자산은 금융자산에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이 포함된 개념이다. 한편 금융부채에는 금융기관대출 및 사적대출액까지 포함된다.

가계부채의 증가 요인

가계부채의 수준이나 변화를 결정하는 데에는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이 모두 작용하기 마련이다.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은 [그림 V-22]과 [그림 V-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금리, 주택가격 상승기대, 소비성 신용대출 증가 등의 수요측면과 금융기관의 대출경쟁 등 공급측면이 동시에 작용한 데 기인한다. 특히 2002년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용은 물론 가격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기대한 주택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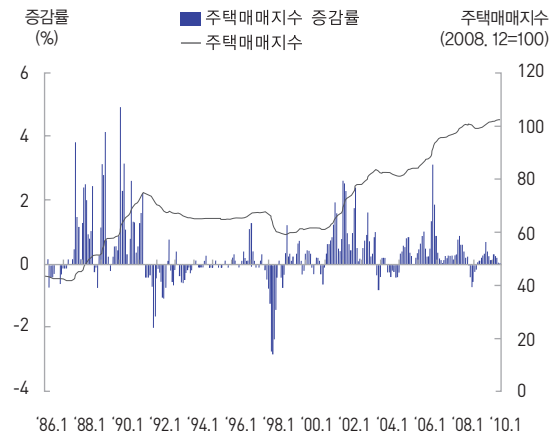
가계부채 증가의 공급측 요인으로 먼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취급 비중이 급속하게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방 확대로 국내 금융기관 간 자산규모 경쟁이 치열해진 점,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대출보다 위험가중치가 작은 가계대출을 선호하게 된 점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림 V-22] 대출금리와 가계대출잔액: 1996~2010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그림 V-23] 주택매매지수 및 증감률: 1986~2010



출처: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도.

또한 가계 입장에서 대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여기에는 금리하락 기조가 지속된 점과 더불어 신용카드 활성화,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등 제도적인 변화 등이 작용하였다. 또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가계가 소비수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 수요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결국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소비자신용이 활성화됨과 더불어 가계의 자산축적이 주로 실물자산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상 특징이 2000년대 초반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발생한 결과로 분석된다. 따라서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의 하락 움직임은 이와 같은 가계부채 증가를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